

## 재외동포청, “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수립 필요”

- 이상덕 청장, 12.19.(목) '제34차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'서 밝혀
- 정부민간 위원들, 내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안건 심의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2.19.(목)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“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, 동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재외동포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, 이 청장은 “이번 실무위원회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”라며, 관계부처간 협조와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.
- 실무위원회\*에서는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해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.

\* 이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(위원장 외교부장관)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체로, '재외동포기본법'에 따라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.

□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‘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’은 올해 1월 확정된 5개년 중장기 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’ (2024~2028년)의 구체적인 실행과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,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\*에 맞춰 총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.

\* ▲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▲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▲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·지원 강화 ▲한인 네트워크 구축 ▲글로벌 중추국가 실현

- 특히 내년에는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▲맞춤형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▲지역별 정착지원 지자체 보조사업 ▲정부-학계-시민단체 간 정책대화 정례화 등 종합적·구체적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.

- 또한 ▲글로벌 차세대동포위원회 운영 ▲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중점 사업 ▲동포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방안 마련 등 추진을 통해 동포사회의 강화된 역량을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·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-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은 앞으로 재외동포정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포 지원 정책을 시행해 모국과 동포 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붙임 : 위원회 회의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	책임자	심의관	곽삼주	032-585-3154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	032-585-3156